

건축주택과 도민 안전과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

□ 주요내용(현황)

- (맞춤형 주거지원) 높은 주거비 등 청년 주거지원 강화 필요
 - 2022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('22.3.21.)
 - * 맞춤형 주택공급 4,707호, 주거비 10,527명/156억 원 지원
 - ** 전년대비 맞춤형 주택공급 1,004호, 주거비 지원 102억 원 증가
- (노후굴뚝 정비) 도내 방치된 굴뚝이 노후화되어 정비 필요성 증대
 - * 소유자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있으나, 철거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
 - 노후굴뚝 현황

(단위 :개소)

구분	굴뚝수	위험 굴뚝		보수관리 굴뚝	유지관리 굴뚝	비고
		자진철거(예정)	안전진단			
노후굴뚝 (20년이상)	325	1	19	11	294	-

* 위험굴뚝 소재 : 창원 11, 통영,1 거제1, 양산7

□ 추진실적

- (맞춤형 주거지원)
 - 청년 월세 확대 지원 : 경남도 주관('22.4~5월 신청접수), 국토부 한시('22.8월~)
 - * (경남도) 1,066명, 월 최대 15만원(10개월), (국토부) 5,100명, 월 최대 20만원(12개월)
 - 도정 최초 청년매입임대(10호) 시범 추진, 국비 4.5억원 추경 확보('22.3월)
 - '22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(거제) 사업추진 업무협약식 개최('22.5.12.)
 - * 경남도·거제시·(재)금파재단(우미건설)·경남개발공사 MOU 체결, 대상주택 공모 중
 - '21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(창원 사파, 6호) 개소식 개최('22.6.13.)
- (노후굴뚝 정비)
 -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추진('22.2.17.)
 - 방치된 노후 굴뚝 안전점검 결과보고('22.3.14.)
 - * 407개소 점검, 행정조치 요구 42개소(자진철거1, 안전진단 24, 안전조치15, 권고2)
 - 굴뚝 안전점검 실무회의 개최('22.3.17.)
 - * 4개 부서(자연재난과, 사회재난과, 식품의약과, 환경정책과) : 지원근거 없음, 자진철거 유도

□ 주요 성과(결과)

○ (맞춤형 주거지원)

-민간참여형*, 공공주도형,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 다양한 공급방식으로 안정적인 청년주택 지속 공급 및 청년 주거비(임대료) 50% 이상 절감

* '20년부터 매년 1개소씩 3년째 민간건설업체 사업비 기부(1억 원) 유치

《 '21.12.~'22.5.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추진으로 이룬 대·내외 성과 》

- ① 2021년 혁신 및 적극행정 道 통합경진대회 장려상 수상('21.12.3.)
- ② 2021년 혁신주간 혁신공무원(이일록 주무관) 왕중왕전 4위 선정('21.12.)
- ③ 2021년 하반기 실시제안(창안상) 채택('21.12.22.)
- ④ 2022년('21년 실적) 정부합동평가 '지역특화 주거복지사업' 우수사례 선정('22.4.)

○ (노후굴뚝 정비)

-노후굴뚝 안전점검을 위한 민간전문가와 관련부서 등 협업추진

* 민간전문가와 육안점검 및 토지정보과 협업을 통한 첨단장비 드론활용

-노후굴뚝의 콘크리트 탈락, 철근노출 등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공중에 의해되므로 자진철거 유도

* 도전문가사군 합동점검 407개소 → 안전진단 및 자진철거 등 행정조치 요구 42개소 → 자진철거 등 2개소

-노후굴뚝 철거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등 정비지원 방안 추진

-노후굴뚝 정비결과(시군)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재정 지원 추진

* 인센티브사업 : 시·군 자체예산으로 정비사업 추진하고 정비결과에 따라 지원(도→시·군, 3~5억)

□ 미흡한 점 및 대책

○ (맞춤형 주거지원) 지방재정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 위주 시행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부족

⇒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 국비지원사업 적극 활용하여 공급 확대 추진

○ (노후굴뚝 정비)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 필요

⇒ 공중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은 연차적으로 검토

-민간시설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민간보조사업 추진 애로

⇒ 노후굴뚝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제·개정 등 추진

⇒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등 건의